

데스크시각

김우성



우리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폭풍으로 몰살을 앓고 있다. 고인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며 화합을 주문했지만 분열의 도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보수, 진보로 편이 갈린 채 곳곳에서 아귀다툼이다. 정치권도 여당은 ‘국회 조속 개최’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선사과’로 맞서고 있어 협상의 여지마저 없어 보인다.

평가권 정책에 분열상 극심

서울대 교수들을 필두로 한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 교수들과 대학생, 종교, 사회운동, 시민단체 등으로 확산일로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후퇴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의침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내 편, 네 편이 갈림이 극명해 국가 장래마저 걱정된다. 대외적으로는 북핵리스크 급증에 글로벌 경제위기 등 국

민불안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러한 사이 경기는 침체되고 빈부격차 사상 최악, 인권상황 악화, 남북관계 후퇴 등 우울한 뉴스들이 연일 매스컴을 장식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런 국론분열과 국민불안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작금의 지식인층 시국선언에서도 드러나듯 현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데서 비롯된다.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말 당선인 신분으로 노 전 대통령과 첫 대면에서 “전임자를 예우하는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1년여 만에 거짓이 되고 말았다. 지난달 23일 새벽 부인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자 전 고인이 이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린다. 취임 초부터 ‘강부자, 고소영’ 정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아랑곳 않

가, 촛불집회 벽에 부딪히자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1년도 채 안돼 인터넷 칼럼니스트 미네르바를 구속하기에 이르렀고, 용산참사의 아픔을 겪게 했다. 오죽했으면 여당 내 소장파들조차 대당평 인사·정치(정책)를 촉구하고 나섰을까.

이제 전직 대통령 자결 후폭풍으로 지식인사회가 중심이 된 시국선언이 붓물을 이룬다. 보수의 언어로는 소란이겠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물결쳤던 ‘추모 민심’이 시국선언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이

진솔한 성찰과 국정 기조 전환이다. 대통령은 시국선언에 담긴 뜻과 추모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 대결단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권 가를 정치를 계속하고 방치할 건가. 이승만 정권의 하야와 전두환 정권 때의 ‘6·29 선언’을 불러온 시국선언 역사가 후대들이 어찌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은가.

통합 이룰 대당평 쇄신안을

지난 1년4개월을 냉정히 평가하고 민심과 유리된 채 흘러온 사안이나 능력을 떠나 사적 관계·보은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부정함으로써 갈등을 키워왔거나 지역·계층·빈부 격차를 심화시켜온 ‘우 편향 정책’에 대한 대대적 쇄신이 이루어야 함도 물론이다. 권력의 시너로 전락한 검찰·경찰 등 공권력의 혁신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전체 교수들의 숫자로 볼 때 소수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기 일쑤고, 공권력만 특례한다. 이런 판국이라 국민들은 화합형 국정쇄신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도 별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국선언의 궁극적 지향점은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다. 통합과 화해의 전제조건은 바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부의

시설

경제위기속 취업시장 여성차별 도 넘었다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의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이고 4명 가운데 3명은 월급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새로일하기 지원본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동안 본부 알선을 통해 취업한 재취업 여성은 모두 45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51%, 비정규직은 49%이며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비율이 75.3%였다. 말이 재취업이지 상당수가 불안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관련기관의 자료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제위기로 사라진 일자리 4개중 3개가 여성 일자리였다. 올해 3월 남성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5만명 줄었지만 여성 취업자는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8천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여성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는 것은 임시·일용직 등 주로 비정규직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악화되면 일용직부터 줄이는 관행상 여성

근로자들이 감원 1순위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근로자들은 취업 시장에서 결혼과 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당하기 일쑤다. 특히 결혼직업기 여성의들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조차 기피대상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남성성에 비해 생계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출산, 육아 등으로 한번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은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다. 실사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 나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주요지표다. OECD 국가들이 자국의 여성취업을 제고에 앞장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직업경력 단절 방지대책 등 여성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여성고용문제는 이제 질적 향상에도 고민해야 할 때다.

비리학원 감사는 교육위원 제정신인가

광주시 한 교육위원이 비리학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말썽이다. 학원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교육위원이 비리에 연루돼 지탄을 받고 있는 사학을 감싸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광주시교육위원회 문동주 위원은 최근 인사비리 사실이 드러나 행·재정적 재고를 받은 정광학원에 대해 제재의 일부를 취소하라고 시 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실 문 교체비, 방난방 설치비 등 7억여원에 달하는 재정적 재고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위원은 학생들의 피해를 그 이유로 들었다.

교육위원이 학생들의 피해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습권 보호는 교육위원의 책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 위원의 주장은 앞뒤가 뒤바뀌었다. 정광학원은 교사를 채용하면 서 순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6명의 교사를 부당 임용한 사실이 적발돼 시 교

육청으로부터 중·고교 교장을 해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법인인 ‘정지 1개월’이라는 눈가림식 처분을 하는 등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시 교육청이 행·재정적 재고를 내린 것이다.

따라서 문 위원이 진정으로 학생과 학교를 걱정했다면 교장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했다. 교장이 물러나면 각종 제재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학생을 핑계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비리사학을 두둔한 것은 교육위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 할 수밖에 없다.

시 교육청은 정광학원 문제를 지금과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임요구를 명시한 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학원을 정광화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문 위원도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잘못된 주장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최희동



DJ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오죽하면 노(老)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는 당연하다는 지지와 ‘당신도 자살하라’는 막말까지 그 진폭이 너무 크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예 거지 않은 사건을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다.

MB정권은 BBK 등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실정과 경제를 실패한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힘입어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MB정권은 민심에는

한 예방조치라고 둘러대는 정부다.

각 계의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나 극우단체, 수구언론의 작태는 더욱 가관이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순수한 마음을 마치 ‘뺨맞긴 정권’에 대한 다투리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귀엽기라도 하다. 더욱 웃기는 것은 마치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정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중증의 병이 아닌지 걱정마저 든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내에서도 쇠

기고

김종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고 합의하지 않은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중상해 운전자’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은 “운전 중 어린이를 치어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께 영광군 군남면 왕복 2차로에서 6세 어린이를 치어 사지마비 상태에 빠뜨린 혐의다.

에 담았다.

하지만, ‘중상’과 ‘중상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이고, ‘중상해’는 ‘뇌나 주요장기의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상실,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영구상실, 또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가능성이 없는 질병’이라고 규정했다.

‘중상’과 ‘중상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 가입자도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를 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운전자들이 많다.

사고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고 ‘중상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무조건 운건이라고 ‘중상해’가 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율은 73.1%로 일본(9.9%)의 7배가 넘는다고 한다. 피해자가 이유 없이 장기입원하거나 중상해 처벌규정을 근거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 보통 운전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도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가 더 많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소수 의견

대법원은 관례도 제시하면서 “코가 잘린 경우, 실명한 경우, 허가 잘린 경우나 치아가 빠진 경우는 중상해가 아니다.”라고 구분했다.

별로 큰 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 다소 과장스럽게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중상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다. 병원의 진단서는 다진 부위와 정도를 중요하게 보고 치료기간은 참고자료로만 삼는다.

그러나 ‘중상해’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교육홍보팀장>

영화산업 위협하는 불법 DVD 철저히 단속해야

개인적으로 취미가 영화감상이다. 물론 극장에 가서 큰 화면으로 보는 감동도 크기는 하지만 집에서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군것질하면서 맘 편히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며칠 전 길거리에서 DVD를 팔기에 욕심내가 불만 영화가 있을까 싶어서 걸음을 멈추었다. 큰 개봉관 극장에서 팔던 영화는 바로 2급 극장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3급으로 내려올 때쯤 비디오 테이프와 DVD로 출시되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한 1년 전후로 개봉된 영화 위주로 눈독을 들이던 중 놀라운 걸 발견했다.

그것은 4월달에 개봉관에서 막 내린 영화가 DVD로 나와 있기에 상인더러 “이게 어

떻게 벌써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요즘은 다 빨리 나온다.”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물건을 집어 들고 봤더니 중국에서 복제해 만든 것이 뻔했다. 그러나 상인은 “복제판이지만 내용이나 화질은 일반 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자랑을 늘어놓으며 문제가 있으면 교환해줄꺼라고까지 말했다.

가격도 만원에 3장씩이나 팔고 있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DVD를 구입하는데 이런 식으로 DVD가 길거리에서 소비자를 유혹하면 기존의 영화시장이 붕괴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러한 불법 중국산 복제판이 나돌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영석·광주시 동구 대인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쇠귀에 경 읽기

아랑곳하지 않고 분단세력과 수구언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학벌과 지역주의에 기대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맹자는 왕이 곧 하늘이었던 전국시대에 이미 ‘백성이 가장 귀하다. 정부는 그 다음이고 왕은 가장 가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성과 함께 즐기고, 백성과 고통을 함께하는 왕이어야만 성군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국민과 민심의 중요성을 설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죽음으로 다시 살았다. 그가 이야기한 ‘미안해 하지마라. 원망하지도 마라’는 말은 마지막 순간에도 화해와 통합 그리고 지역주의 청산을 바라는 그의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더욱 아프고 추모의 정이 더욱 깊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죽음을 두고도 ‘서거가 아니라 자살’로 표기해야 한다는 몰지각과 조문객의 숫자를 부풀렸다는 저속한 놀음을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극우인사들의 수준이다. 또한 경찰버스로 대한문을 통제하는 것도 모자라 발인이 끝나자마자 새벽녘 조문소를 강제 철거하고, 텅 빈 서울광장을 경찰 버스로 막고 나서 하는 말이 폭력시위를 위

한 신이니 인적 청산이니 청와대를 겨냥한 발언들이 서슴없이 나왔을까.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국민 대다수의 민심을 뚫을는 척, 못 보는 척하기에 시중에서는 요즘 ‘우이독경(牛耳讀經) 정권’, ‘침팬지와 정권’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 아닐까.

정권과 국민과는 이기고 지고 하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 요구가 정권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 공권력을 앞세우고 사정기관을 동원하는 반민주적 발상과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자는 것이며, 부자와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닌 서민을 위한 경제정의의 실현과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헌법의 준수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다는 맹세를 국민 앞에서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 스스로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밤이 길에 상생과 화해, 소통을 위한 열린 귀와 밝은 눈을 얻기 바란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걸품을 쓰는 코너입니다.

고운 우리말 '동무' 쉽게 쓰고 들을 수 있었으면

아이와 함께 공을 차던 중 우연히 지나가던 제 또래 아이를 보고선 ‘동무야, 같이 축구하자’라며 불러 세웠다. 그러자 그 아이 엄마가 기겁을 하며 “너는 동무가 뭐냐? 북한 애도 아니고?”라며 놀라는 게 아닌가. 순간 아이는 난감해 했다. 당연히 틀린 데가 없는 표현이다. 그런데도 분단 이후부터 북한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로 금기어가 배

렸으니 너무나 안타깝다. ‘동무’는 ‘친구의 옛말’ 일뿐이다. ‘동무’라는 말은 가족 ‘동무생각’이나 ‘가고파’에도 나오는, 결코 지나간 옛말이 아니다. 게다가 ‘친구’보다 훨씬 정감 있고 입에 붙는다. 진짜 우리말인 ‘동무’가 정말로 사람들 뇌리에서 사라지기 전에 살려내어서 우리 겨레가 두루 쓸 수 있기를 바란다. ▲김기영·광주시 북구 운암동

無等鼓

최근 세계적인 축구스타가 8천만 유로(1천644억원)라는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팀을 옮긴 것이 세간의 화제다.

이 정도라면 최고급 평면 52인치 TV 8만대를 살 수 있는 액수다. 이적한 그의 주급도 20만 유로(4억1천400만원)로, 연봉 4천만원짜리 100명분에 달한다. 그런 그가, 무엇이 다급했는지 이적과 동시에 미국으로 날아가 바랍둥이로 소문난 여성스타와 진한 하룻밤을 보내면서 2천500만원을 술값으로 지불했다 해서 또 입살에 올랐다.

제 돈 제 맘대로 쓰는 것을 누가 탓하겠는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축구영웅과 한술밥을 먹은 그녀서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돈에 휘둘러온 선수의 앞날이 뻔하다는 것을, 고금에나 동서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일까.

돈 거머니(money)는 ‘경고자’를 뜻하는 라틴어 ‘모네타(moneta)’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로마신화에서 주피터의 아내 주노는 신들의 여왕으로, 그녀에

게는 많은 의무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로마인들에게 탁월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경고의 여신으로 그녀의 또다른 이름은 ‘주노 모네타(Juno Moneta)’ 즉 ‘경고자 주노’로 불렸고, 로마에 있는 신전 가운데 하나에 그녀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후 로마인들이 주화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주조소를 모네타 신전

안에 뒀고, 이때부터 ‘경고자’라는 의미의 모네타가 ‘화폐주조소’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시작했다.

모네타는 고대 프랑스어 ‘모넬레(mon-ele)’를 거쳐 중세영어 ‘모니에(moneye)’, 오늘날의 머니로 정착한다.

돈으로 흥한 사람이 많지만, 돈 때문에 신세 망친 사례도 그에 못지 않다.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박모, 천모 씨 등도 그런 경우다. 프로축구와 야구에서 ‘먹튀(먹고 뛰었다는 뜻)’ 들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경고자’로서 돈의 의미를 망각했던 탓 아닐까.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경고자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CF A X 227-9500	CF A 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CF A X 02-773-9335	
C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